세계헌법재판동향 뉴스레터 제40호 소개

□ 헌법판례동향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장기수형자 동반외출의 허가거부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은 장기수형수가 교도관과의 동반외출을 신청한 것을 거부한 처분에 대하여 법원의 재판을 거쳐 연방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연방헌법재판소는 법원이 재판을 함에 있어, 수형자가 석방 이후 생활능력을 유지하고 재사회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는 점을고려하여 동반외출이라는 개방적 형집행의 허용 여부를 결정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면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부도덕하거나 물의를 빚는 상표의 등록을 금지하는 연 방상표법 규정에 대한 위헌 판결> 사건은 '부도덕하거나 물의를 빚는' 상표 를 상표 등록금지사유로 규정한 연방상표법에 관한 사건입니다. 연방대법원 은 위 규정이 관점차별적 조항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위 규정을 합헌적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수 있으므로 위헌에 이르지 않 는다는 반대의견들도 있었습니다.

프랑스 헌법재판소의 〈직접 신문 없이 화상통신 신문에 의하여 석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이 피의자의 방어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사건은 테러범죄로 구금된 피의자가 석방요청을 할 경우 화상통신 신문을 통하여 석방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하고, 법정 이송이 공공질서에 심각한 위협이 되거나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화상통신 신문을 거부할 수 없게 한 법률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직접 신문 대신 화상통신 신문을 인정할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중죄를 범한 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구금후 1년이 지나서야 재판정에 출정하여 직접 신문받을 수 있게 되므로 심판

대상조항이 피의자의 방어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유럽인권재판소의 <지식공유 웹사이트에 직무관련 글을 게재하였다는 이유로 직원을 해고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은 헝가리의 은행 직원이 직무와 관련된 글을 자신이 운영하는 지식공유 웹사이트에 게재하여 해고되고 헝가리 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도 구제받지 못하자유럽인권재판소에 제소한 사건입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헝가리 사법부가 노사관계에 있어 표현의 자유와 사용자의 이익을 균형 있게 보장하였는지를 판단하면서, 직장에서의 표현의 자유가 반드시 공공의 이익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경우에만 보호되는 것은 아닌 점, 누설된 정보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 정도, 해고라는 제재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헝가리 사법부의 결정이 유럽인권협약 제10조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스페인 헌법재판소의 <성년자에게만 성별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의 위헌성> 사건은 미성년자의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서 자녀의 성별 표시변경을 신청하였으나 거부되고 법원에서도 구제되지 않자 성년만 성별 표시등록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법률의 위헌성을 다툰 사건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조항이 충분히 성숙하고 안정적인 성전환 상태에 있는 미성년자에게까지 성별변경을 금지하여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의 필요를 넘어 과도하게 미성년자의 사생활권과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위헌이라고 선고하였습니다.

일본 최고재판소의 <아담스 방식을 도입한 중의원 소선거구 선거구획 규정의 합헌성> 사건은 선거구간 인구수가 최대 2배 이상 차이나는 기존 선거구획에 대하여 최고재판소에서 연이어 위헌판결이 내려진 후 국회에서 2020년부터 이른바 아담스 방식을 도입하도록 결정하였으나, 그 이전인 2017년에실시된 중의원의원 총선거 당시 일부 선거구의 위헌 여부에 관한 사건입니

다. 최고재판소는 투표가치의 평등을 실현하고자 새로운 의석수 배분 방법을 어떤 시점에서 반영시킬 것인가는 국회에 재량이 인정되고 그 재량권 행사는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선거구 획정이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반대의견도 있습니다.

일본 오사카고등재판소의 <문신(타투)시술자에게 의사자격을 요구하는 의사법의 합헌성> 사건은 의사자격 없이 문신시술을 업으로 하는 사람을 의사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비록 하급심 판결이지만, 일본의 의사법이 의료인에게만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우리나라 의료법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의사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문신시술자의 직업의 자유 침해 여부를 본격적으로 다루었다는 점에서 살펴볼 만한판례라고 생각됩니다.

□ 세계헌법재판기관 소개

호주 연방대법원 및 일본 최고재판소를 소개하였습니다.

□ 언론 속의 세계헌법재판 및 세계헌법재판 관련 논문 목록

2019년 10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언론 기사 속에 비친 세계헌법재판동향을 모아 놓았습니다. 세계헌법재판 관련 논문 목록에서는 최신 학회지에 실린 세계헌법관련 논문들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 국외통신원 소식

미국 통신원 소식으로 소개된 〈미국 기후변화 소송의 헌법적 쟁점: 오리건 주 연방지방법원의 Juliana v. United States 사건>은 21명의 청소년들이 미국 정부를 대상으로 기후변화의 원인을 제공한 정부의 정책이 청소년들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했다며 제기한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미국 정부가 소송 각하 신청을 한데 대하여 오리건 주 연방지방법원은 사건이 소송요건을 갖

추었다고 판단하고 이를 기각하였습니다. 연방대법원 판결은 아니지만 미국 정부의 정책과 기후변화 사이의 연관성을 인정한 점, 이것이 정치적 문제 (political question)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점, '안정적인 기후를 보장받을 권리'를 기본권으로 인정한 점 등을 주목할 만합니다.

일본 통신원 소식으로 소개된 <일본에서 국가적 차원으로 행한 우생수술에 대한 국가배상소송>은 과거 일본에서 행해진 장애인 불임수술에 대하여 최근 제기된 국가배상 청구소송에 관한 것입니다. 청구인들은 피해배상 입법을 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주위적으로, 우생수술 자체에 의한 손해배상을 예비적으로 청구하면서 예비적 청구의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에 소멸시효가 적용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센다이 지방법원은 청구인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나 이 사건을 비롯한 일본 내에서의 우생수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움직임에 힘입어 2019년 우생수술 피해 배상에 관한 특별법이 만들어졌습니다.